

“정의로운 전력체계 구축” 전북 진보 野 6당 한목소리

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정의당 · 녹색당 도당 등
용인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 이전 · 초고압 송전탑 건설 재검토 등 촉구
“전북, 다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 수도권 전력 독식 멈춰라”

전북 전역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과 관련해 진보성향 야 6당 전북도당이 20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공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 회견에는 기본소득당(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장 김철호) ·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김상운) · 사회민주당(전북도당 위원장 박형규) · 정의당(전북도당 위원장 오현숙) · 조국혁신당(전북도당 위원장 정도상) · 진보당(전북도당 위원장 전권희) 등 6개 진보정당 전북도당 관계자와 송전탑 반대대책위 회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야 6당은 “전북이 또다시 수도권 산업의 전력공급을 위한 희생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전북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초고압 송전망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계획을 언급하며 “3,855km, 99개 구간에 달하는 대규모 송전·변전 시설이 전국에 추진되는 데, 그 핵심 피해 지대가 전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창·부안·정읍·완주·임실·진안·장수·남원·무주 등이 345kV 초고압 송전선 경로로 지정돼 주민 갈등이 이미 표출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김철호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장은 “전북 주민 의견은 무시된 채 수도권 중심 전력 체계만 강화되는 구조”라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당 김상운 공동운영위원장은 “조대형 산단 전력수요를 지방 생태환경 파괴로 충당하는 방식은 개발독재의 잔재”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탈핵·재생에너지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 전북도당 박형규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은 대기업 이익을 위해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전력의 공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오현숙 위원장은 “장거리 송전망은 노동자 안전과 기후 정의를 외면한 정책”이라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 지립체계와 지역 RE100 산업단지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정도상 위원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을 제대로 구축했다면 송전탑 없이도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었다”며 “분산형 RE100 산업단지 체계로의 전환이 에너지 정의와 균형성장을 위한 해법이다”고 했다.

진보당 전북도당 전권희 위원장은 “지역은 전기를 생산하고 혜택은 수도권과 대기업이 독점하는 악발적 구조를 언제까지 용납해야 하느냐”며 “지

역주민과 농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 6당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송전망 계획을 “운석열 정부의 개발독재 방식 그대로를 답습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참여가 배제된 채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형식적 설명회만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정책은 주민 등의 위에 세워져야 한다. 절차 없는 송전망 계획은 국가정책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전북은 다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며 “수도권 전력 독식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전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용인반도체 산단과 국가 전력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송전탑 건설을 중단이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분산형 에너지 공론화를 즉각 추진하며, 용인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전 하라고 촉구했다.

야 6당과 전북송전탑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정례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후 국회 토론회, 중앙당 공동 행동,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정부의 송전탑 정책 전면 재검토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 진보 야6당 송전탑 통과 반대 현장 찾은 한 주민의 목소리

“왜 꼭 사람 많이 사는 소양을 관통해야 하나”

완주 소양면 거주 송이목씨

“정읍에서 이어지는 용인

반도체 전력공급 사업 일부

송전탑 건설 막기 위해 나서”



20일 오전, 야 6당 송전탑 반대 공동 기자회견 현장을 가장 먼저 찾은 이는 완주군 소양면 주민 송이목 씨(사진)였다. 그는 “소양을 관통하는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나섰다”며 심경을 밝혔다.

송 씨는 소양을 지나도록 설계된 송전탑 노선이 “정읍에서 경북까지 이어지는 용인 반도체 전력공급 사업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한전은 운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큰 기대했지만 사업이 계속되니 주민들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그는 특히 이번 노선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을 우회할 수 있음에도, 인구 밀집 지역인 소양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도만 봐도 소양을 꼭 지나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도로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듯, 일부 구간을 배제해 선로가 소양으로 몰리게 해놓은 구조입니다.”

또한 임시 선정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지 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 대신 공무원들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참여한 위원들조차 해당 내용을 잘 모른 상태였어요.”

송 씨에 따르면, 현재 소양면 주민들은 이미 반대 대책위를 꾸렸고 완주군·전북·전국 단위로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한전을 상

대로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 진산·금산 지역 사례를 참고해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그는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행정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역 발전 전략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논의해야 하는데, 왜 주민들이 생업을 미뤄가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뛰어다녀야 합니까? 삼성 등 대기업 이전 문제도 도지사·국회의원이 나서 설득해야 하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송 씨는 이번 송전탑 문제가 “전북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들은 단지 ‘우리 마을만 살려 달라’는 마음이 아니다”라며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 원칙에 맞게 다시 설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씨는 에너지 지자지소 사용 원칙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행정기관과 정치권이 일치 단결하여 노력해서 못 배운 주민들이 더 이상 전북발전을 걱정하지 않아야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이희성 변호사, 민주 정청래 대표 특보로



‘혐오·차별 두둔 국힘, 2차 가해 공범’

민주 도당, 국힘 박민영 대변인 장애인·여성 비하 발언 관련
“박 대변인 두둔 장동혁 대표 비롯한 지도부 태도, 피해자 모욕”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여성 비하 발언과 이를 두둔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광운 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은 20일 밝힌 성명에서 “박민영 대변인이 김예지 의원을 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눈 불편한 것 빼고는 기득권’, ‘여성과 장애인의 정체성을 방해로 삼는다’는 등 차별적 혐오 발언이 이어가 국민적 공분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사과는커녕 오히려 박 대변인을 두둔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태도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노골적 2차 가해”라며 “국민의힘은 혐오와 차별을 방조한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전북도당은 “국민의힘은 혐오와 차별을 두둔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분명한 사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라”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순한 실인이 아닌 혐오와 폭력에 기반한 위험한 선동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힘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도 높여 비판했다. 특히 “당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측 입장에 대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운석열 내란 세력 청산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존엄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극우 세력에 기대 혐오와 갈등의 정치에 몰려들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번 변호사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 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기찌뉴스대응 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현재는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 응특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운석열 정권 하에서 자행된 경찰의 조작수사를 규명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만호 기자

GLOCAL 30 WONKWANG UNIVERSITY

원하는대로 원더랜드 원광대학교

2024년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선정대학

Since 2026
원광대학교 +
원광보건대학교 통합

국내최초
다학년제
운영

202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2025. 12. 29.(월) ~ 12. 31.(수)

2026학년도 편입학모집 원서접수
2025. 12. 08.(월) ~ 12. 12.(금)



전북 전역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과 관련,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성향 야 6당 전북도당이 20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공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 용역 최종보고회

도의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방향 연구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방향 연구회(대표 국주영은 의원)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이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 지역 특성과 시민 돌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도출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도의회 진행을 맡은 국주영은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북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전북형 돌봄모형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서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권근상 교수는 ‘노인의 노쇠정도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시하며, ‘시군의 보건조직과 돌봄조직의 연계는 보건교육 공동운영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



도의회, 4대폭력 예방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0일 의원총회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간부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기관장과 고위공무자 대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건강한 조문화 조성을 위해 펼쳐졌다.

이번 교육은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권지현 강사를 초청해 ‘서로의 안녕을 위한 성인지감수성 높이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문승우 의장은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 서는 고위공무원의 인식이 필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감과 배려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